

與野 지도부 총출동... '외연 확장·진영 결집' 성과 귀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4기 추도식

김기현, 이재명 등 봉하마을 찾아
한덕수 총리, 이진복 수석 자리
재단 측 추산 시민 7000명 참석

여야 정치인들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대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노무현 재단 측에 따르면, 7000여명의 시민들도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선, 당시 민주당 측 선거를 이끌던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정권교체 후 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14주기 추도식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신분으로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연속 김경수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다. 정부 측 인사로는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현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여권에선 김기현 국민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힘 대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제일 먼저 추도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노 전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정치 개혁을 갈망하셨다. 여의도 높은 담벼락 안에 있던 우리 정치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동부서주하셨다”면서 “그렇게 사랑방 정치, 제왕 정치의 막을 내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 정치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김 의장은 2002년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재정경

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려하자 객석에선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님은 국정 모든 분야에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다. 그 중 가장 힘쓰셨던 국정과제는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이었다”며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셨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금 더욱 절실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가오는 문제다.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님께서는 일찍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평생을 사셨다.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호헌 철페,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쳤다”면서 “비난이 두려워도 피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결단을 하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

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14년이 됐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춰거나 과거로 일시 후퇴한 것 같다”면서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들과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당정,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후속조치 착수

노동개혁특위, 관련 규정 정비 예고 “노조 회계공시, 세액공제 연계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1호 특별위원회’인 당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지만, 노조 회계 재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분은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 하면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대내외적인 민주성, 자주성을 확보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회계공시·세액 공제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방안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부분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공시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법 상 기부금인 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 포털 내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9월부터 운영) 및 공시 시스템 통한 노조 결산 결과 공표 지원▲노조 회계공시 요건에 조합비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올해 회계 결산 결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내년부터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회계 감사원 자격도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계 감사원으로 두기로 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 또는 회계법인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대통령 “韓, 국제사회서 존중받고 있어”

국무회의서 외교 슈퍼워크 성과 자평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G7 참석 전후로 양자 정상외교를 소화한 ‘외교 슈퍼워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 재산 1억 늘때 국회의원 7.3억 ‘경충’”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증감현황 국민의힘 14.8억, 민주당 6.4억 ↑

우리나라 국민 재산이 3년 사이 1억 원 증가한 반면,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이보다 7.3배 많은 7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이 2020년 27억5000만원에서 2023년에는 34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3000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평균 재산이 2020년 42억원에서 2023년 56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4억8000만원에서 2023년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증가했다. 정의당은 2020년 5억4000만원에서 2023년에서 8억원으로 2억6000만원 늘었다.

경실련은 “국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의 재산은 부동산 재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비부동산 재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與 “선관위 ‘北 해킹·특혜채용’ 의혹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 점검을 받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해킹 시도 의혹에 따른 보안 점검 여부를 두고 “헌법상 독

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안전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3일 항의 방문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항의 방문에는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선관위는) 합동 점검에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고려, 가급적 빠른 시간에 3개 기관(국정원·KISA·선관위)이 보안 컨설팅을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자녀가 선관위에 재직 중인지에 대한 전수 조사다.

/최영훈 기자